



지식공유 브리프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특

기후위기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동향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 대선 후 산업·통상정책

디지털 격차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동향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SP 포커스

[2023/24 불가리아 KSP] 미래에 대응하는 불가리아 건설산업의 도전과 기회



CID 연구포커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소식

YKSP 7기 수료식 및 8기 오리엔테이션, YKSP 동문의 밤 개최



행사

KSP 20주년 성과공유컨퍼런스: KSP 20년 성과와 비전 개최

KDI-Brookings 공동세미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불평등과 글로벌 경제 융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지식공유브리프 특별호를 기획하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 소장 김정욱
awaker2@kdi.re.kr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디지털 기술 격차, 글로벌 공급망의 진영화와 같은 다양한 글로벌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구조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 차원의 협력적 대응이 긴급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식공유브리프는 특별호로서 '글로벌 복합위기 및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빈곤, 불평등, 그리고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관되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이번 특별호를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국제개발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호가 각국의 개발정책과 국제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독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특별호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식공유브리프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김정욱 드림

기후위기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동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sjkang@korea.ac.kr

● 기후위기와 대응

요즘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보다 기후위기(climate crisis) 용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위기가 단순히 개인의 건강에 대한 영향에서 더 나아가 섬국가(island country)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안보 문제까지 연계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된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1992년), 교토의정서(1997년), 파리협정(2015년)을 통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즉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려고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IPCC는 2018년 「1.5℃ 특별보고서」와 2023년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 넷제로 정책의 과학적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달성하려 하는 데 있다. 특히 선진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을 보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 반면에 현재 배출 국가를 보면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emerging country)의 책임이 더 크다. 따라서 선진국만의 노력이 아닌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제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와 경제발전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만 고려하면 어렵지 않다. 1972년 로마클럽이 출간한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제안하였듯이 경제성장을 억제하면 된다.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면 온실가스 배출이 자동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계 어느 국가도 경제성장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기술혁신을 꾀하여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흥국들은 비록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책임이 더 높으니 온실가스 감축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이 바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와 경제발전을 상호 도움이 되게 하자는 시각이다.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 위원회(WCED)가 발간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으로 노벨상 수상자인 모한 무나싱헤(Mohan Munasinghe)는 경제성장, 친환경 및 사회발전이 상호 대립적이 아닌 서로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 이러한 시각은 현재까지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

● 기후위기와 국제개발협력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국제사회, 특히 신흥국들은 경제성장을

포기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특히 현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처럼 신흥국이지만 역사적으로 기후위기의 책임은 선진국에 있다. 그리고 신흥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싶지만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싶기에 선진국의 적극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유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2015)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2016~2030)이다. SDGs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17개 목표를 구체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흥국 입장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무나싱헤의 지속가능경제학(sustainomics)이다²⁾. 이는 선진국의 국제개발협력을 바탕으로 신흥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세 분야는 기술, 금융, 인력양성이다.

기술 분야에서 신흥국으로 기후기술(녹색 기술)을 이전 하는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가 있다. 이는 기후기술 정책을 담당 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함께 UNFCCC 당사국 간에 기후기술

1 Munasinghe, M., 1992, Environmental Economic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UN Earth Summit, Rio de Janeiro.

2 Munasinghe, M., 1995, Making Economic Growth More Sustainable, Ecological Economics, 15, pp.121-124, 강성진, 2022, 『경제발전론』, 제2판, 박영사.

개발과 이전이 원활하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재정지원은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광범위한 재정지원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DAC 회원국의 ODA(1990~2019) 중에서 환경마커 녹색 ODA는 2.3%이고, 리오마커 녹색 ODA 비중은 1.7%에 불과해 아직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³⁾ 그 외에도 신흥국의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려고 2010년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 자신들의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많은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려면 개발도상국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2005년 파리에서 열린 원조 효과에 대한 고위급 회담(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이 채택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에서 수원국의 주인 의식(ownership)이 중요하다고 선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 맺음말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재정, 인력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비록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노력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 부문에서 선진국과 성공적으로 국제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바라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

산업혁명을 통하여 전 세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지만, 기후위기는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우리 인류 공동의 책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경제성장을 높게 유지하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노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주 : COP 27, Shutterstock.com

3 강성진, 2022,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ODA 및 녹색 ODA 추이 비교," 국제개발협력, vol.17, No.1, pp.23-46.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 대선 후 산업·통상정책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지형

j-hpark@snu.ac.kr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아직 진행형이며,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주요 원자재 혹은 부품의 수출통제, 100%에 이르는 고율 관세부과 등 오히려 격화되었다. 미·중 간 헤게모니 경쟁은 다자주의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의 실질적 무력화로 이어졌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무역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원고는 2024년 9월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미래컨퍼런스에서 통상환경의 격변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당시 한 달 열흘 정도 남은 미국 대선 후 한국이 지향해야 할 산업·통상정책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국제무역질서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가 GVC(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R&D 지원 강화,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한국경제의 GVC상 역할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세계적 과잉생산에 대비하여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필자는 미·중 무역전쟁의 시발점이 된 신보호주의 등장과

WTO 체제 약화,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및 한국 무역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 글로벌 통상 이슈를 간략히 논할 것이다.

신보호주의, 즉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정책은 선진국 분배 문제의 악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선진국, 특히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인적자본을 포함한 자본 분배의 불균등화가 심화하였다. Mayer(1984, AER)는 자본 분배의 불균등화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선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핵서-올린 무역 모형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역은 선진국 자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동의 소득은 감소시킨다. 자본과 노동이 모든 경제주체에 고르게 분배되어 있다면 모두가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자본 분배의 불균등화가 높아진다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간선거권자(median voter)가 자유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보호무역정책을 선호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분배 문제의 악화는 미국 러스트벨트 지역 제조업 노동자의 대중국 보호무역정책 선호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고, 그 후에도 이러한 정책이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된 정치적·경제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미국이 시작한 대중국 관세인상과 이에 대응한 중국의 관세보복은 WTO 체제의 안정성을 약화시켰다. 또 미·중 무역전쟁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WTO 상소기구 판사 재임용 거부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무력화시켜 다자주의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필자는 게임이론을 적용해 미국과 같이 정책적 투명성이 강제되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와 교역 관계에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으로 손해일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힘들어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를 막는다면 미국은 WTO가 없는 상태보다 못한 내시(Nash) 균형에 이르게 되며,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를 더는 유지할 유인이 없게 된다.

국제적 헤게모니 강화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추가적 이익을 제공하면 헤게모니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에 대해 각국은 표면적으로 자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미국이 NVIDIA 차세대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일은 자국 기업에 큰 손실을 주었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헤게모니 경쟁의 우위를 강화하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선진국 분배 문제의 악화, 중국 정책집행의 불투명성, 미-중 간 헤게모니 경쟁 모두 구조적인 문제여서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자주의 무역질서 약화와 전략적 산업경쟁 격화에 따른 통상마찰 및 관련 GVC 재편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및 무역 질서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한국경제에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미·중 관세전쟁의 영향을 분석한 Fajgelbaum et al.(2024, AER: insights)에 따르면, 관세전쟁은 오히려 한국으로 하여금 관세전쟁 대상 품목(비대상 품목 대비)의 전 세계 수출을 증가하게 만들었다. 또 이러한 수출 증가의 경로가 해당 산업의 특징이 아닌 해당국의 특징임을 알아냈고, 관세가 상승한 제품의 대체재를 공급하는 국가가 규모의 경제 등을 활용해 해당 제품의 미·중 수출 증가분 아니라 다른 국가로 수출 또한 증가시켰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국제무역질서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 기술에 있고 이는 여러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이다. 높은 수준의 Mega FTA이자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같은 개도국을 포함한 CPTPP 가입은 한국 경제의 GVC상 역할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R&D 지원 강화 및 해외투자의 공격적 유치도 CPTPP 가입과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 CPTPP의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 및 차별대우 금지 조항은 향후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끝으로, 중국 및 OECD 주요국의 경쟁적 산업지원 정책은 해당 산업제품의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과잉생산이 불투명한 지원에 근거하면 국내기업이 불공정 경쟁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관련 법안을 보완하고 이러한 법안에 근거해 과잉생산과 불공정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적절히 보호하는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디지털 격차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동향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서용

seoyongkim@ajou.ac.kr

● 뉴디지털 격차의 개념¹⁾

뉴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지능정보기술의 보유, 접근, 활용, 역량에 따라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경제, 정치, 사회, 문화, 과학기술, 공공)과 모든 수준(개인, 집단, 지역, 기업, 국가)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보유하고 접근하는 데서 생기는 1차적인 격차뿐만 아니라 이러한 격차가 초래하는 2차적인 결과까지 포함한다.

기존의 정보격차는 특정 ICT 기술 보유 여부에 따른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취약계층(노인, 농어업인,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뉴디지털 격차는 이들 집단뿐 아니라 일반인 집단에서 발생하고, 격차의 차이가 크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이와 같은 뉴디지털 격차의 영향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적·사적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며, 이는 개인과 사회에 근본적인 기회인 동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 정보격차와 뉴디지털 격차의 차이

	정보격차	뉴디지털 격차
	과거	현재
개념	• 소외계층 중심으로 한정하여 특정 기술과 기기(컴퓨터)의 사용 능력 및 접근성에 대한 격차	• 디지털 전환의 결과로 발생한 급격한 사회변화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서 차별적 상황
용어	• 정보격차, 정보격차 1.0, 디지털 격차	• 뉴디지털 격차
범위	•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전통적인 소외계층	• 전 계층에 걸쳐 발생하는 격차 • 개인·집단·지역·기업·국가 간의 격차
대상기기	• 컴퓨터(PC), 모바일 기기 등 하드웨어	• 기존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생활기술(life technology) 및 소프트웨어
격차 발생 영역	• 하드웨어의 단순 접근과 소유, 활용 수준에 따른 격차	• 하드웨어의 단순 접근과 소유를 포함한 하드웨어 내 소프트웨어 접근 및 활용 수준, 보유, 역량에 따른 격차
격차 대상	•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격차	•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격차를 포함하고, 사용자 역량에 따른 일반사용자 간 격차 •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격차까지 포함함
획득정보	• 단순 정보의 양을 강조	•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획득한 정보의 질(콘텐츠)을 강조 • 획득한 정보를 재가공 및 활용할 수 있는 수준
파급력	• 하드웨어에서 소유와 활용에 따른 제한된 영향 범위	• 대상물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전방위적 영향 범위

자료: 저자요약

1 김서용. (2022). 디지털 대전환 시대, 뉴디지털 격차와 정부역할. 2022 KISDI megatrend conference 발표자료.

● **新디지털 격차의 영향**²⁾

新디지털 격차는 기존 경제와 사회질서를 재구조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부문에서 빅테크·플랫폼 기업 지배력 강화로 선진기업의 시장독점 문제, 노동 부문에서 디지털기술의 노동자 대체로 구조적 실업 심화 문제, 국제적으로 국가 간 디지털 격차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시작된 문제의 흐름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기술기업인 빅테크·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독점이 강화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AI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디지털 전환의 차이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기술개발 격차, 생산 효율성 격차, 시장지배력 격차, 시장변화 대응능력 격차 등 기업 간에 新디지털 격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2021년 기준 Statcounter Globalstats 자료에서 빅테크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검색엔진은 Google이 92%, SNS는 facebook이 72%, 데스크톱 OS는 Windows가 75%, 모바일 OS는 Android가 72%를 차지한다.³⁾

디지털 전환 현상은 특정 국가, 지역, 개인이 아닌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승자는 국가를 초월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자본과 기술이 열위에 있는 개도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선진국 종속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 일자리 측면에서 볼 때 新디지털 격차의 가속화는 삶의 기초가 되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노동이나 조립 등 저임금 단순노동자는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McKinsey(2017)는 4차 산업혁명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15~30%가 감소(약 4억~8억 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같은 일자리 위협은 노동집약적 경제구조를 가진 개도국에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셋째, 국제적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2021년 UN 전기통신연합(ITU)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약 49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에,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인 29억 명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못하였고, 이 중 96%는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 **新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

新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9월 25일 정부에서 일명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디지털 심화 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세계를 선도할 보편적 디지털 규범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권리장전 기본원칙 제5조에는 인류 후생의 증진을 위해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는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후생 확대와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도록 보편적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전 세계 국가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AI·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영향력을 인식하고 관련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김서용. (2022). 디지털 대전환 시대, 新디지털 격차와 정부역할. 2022 KISDI megatrend conference 발표자료.

3 Statcounter Global Stats. (2021).

유엔개발계획(UNDP)은 “디지털 전략 2022-2025”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Technology Bank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설립하여 과학,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Connect 2030 Agenda”를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75%가 브로드밴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디지털 발전 파트너십(Digital Development Partnership)”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정부 서비스 개선,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UNESCO는 “정보사회를 위한 정보 프로그램(Information for All Programme)”을 통해 정보 접근성, 정보 보존, 정보 윤리 등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리더십을 향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新디지털 격차와 국제협력

新디지털 격차에 따라 선진국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크게 받아 더 빠르게 경제 성장과 혁신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기술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발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국가 간 부의 불균형을 높이고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UN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 '22.6).

新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인류 후생 증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제26조 국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디지털 기술이 환경과 생태, 기후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류 공동체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제27조 국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세계 시민의 공동번영을 위해 디지털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디지털 국제규범 등을 위한 협력’(제28조 국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보편적인 디지털 국제규범의 형성과 집행, 디지털 위험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국 정부는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과학기술·ICT OD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 ODA 규모는 2018년 2,700억 원에서 2022년 4,500억 원으로 4년 만에 67%, 연평균 14%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다.⁵⁾

세계 각국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Power Africa 이니셔티브 사업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전력 접근성 향상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국가의 디지털 포용성을 향상하는 Digital Access Programme,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Prosperity Fund를 운영하고 있다. EU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EU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위해 Digital 4 Development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3,0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에너지, 교통 인프라 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는 선진국의 노력을 보면 단순히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지원, 기술과 인력 지원, 거버넌스 지원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4 ITU. (2021). Measuring digital development Facts and Figures 2021.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Development Sector. <https://www.itu.int/itu-d/reports/statistics/facts-figures-2021/>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2).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대한민국 정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선이
seonihan@kiep.go.kr

●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성과

아프리카와의 첫 다자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주제로 2024년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국가원수가 직접 참석한 25개국을 포함해 초청받은 48개국이 모두 참석하였다. 주요 국제기구인 아프리카연합(A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도 참석하였다.

첫날 진행된 다자회의에서는 7대 분야인 교역 및 투자,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지속가능한 인프라, 직업훈련 및 교육, 디지털 전환 및 과학기술,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 평화 및 안보에 관해 논의하였다. 각국 정상들은 전쟁의 폐해를 딛고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한국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이며,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을 배우고 양측의 협력을 강화해 동반성장을 이뤄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공동주재국인 모리타니의 가주아니 대통령과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양측의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적원조 및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해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기후변화, 보건 위기, 식량 불안 등의 과제에 대한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연대하기로 약속했다. 이튿날 개최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식량 및 핵심광물 안보 강화,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19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릴레이 연설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자국에서 특별경제구역 설립, 비즈니스 절차 간소화 등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해 에너지, 농업, 보건, 관광, 스타트업,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고위급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회의 규모만큼이나 성과도 크다. 정부·공공·민간 차원에서 아프리카 26개국과 교역·투자, 에너지 및 인프라, 농업, 기후변화,

1 이 원고는 한선이 외(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협력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핵심광물, 보건, 해양·청색 경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 및 협약 60여 건이 체결되었다.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를 포함한 8개국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고, 탄자니아, 모로코와는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구체화하였다. 앙골라와 짐바브웨를 포함한 4개국이 K-라이스벨트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고, 무역협회는 AfCFTA 사무국과 공동으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했다. 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국과 아프리카 48개국이 공동으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하였다. 민간 기업도 아프리카 12개국에서 온 파트너사와 계약 22건을 체결했다.

시사점

최근 복합 위기로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경제 안보가 강조되면서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며 새로운 기회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기회의 땅으로서 아프리카의 가치가 재정립되고 신냉전 시대에 비동맹 외교의 각축장이 되면서 일본, EU, 중국, 미국 등 전통적인 파트너뿐만 아니라 인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신규 협력국도 아프리카 대륙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내에서 역사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양자 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기존의 파트너와는 다른, 상호 존중이 가능한 동등한 파트너십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아직 협력 수준은 미미하지만 식민 지배와 빈곤이라는 역사적 공감대를 가진 한국이 진정성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연합(AU)은 장기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립경제 달성을 목표로 산업화와 수출

주도 경제성장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은 아프리카에 영감을 줄 수 있다. 한국에도 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국제협력과 질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첫 수교 이후 63년 만에 새로운 차원에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동 성장 파트너로 거듭나도록 한국 정부는 장기 비전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대외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태도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대아프리카 공적원조(ODA) 규모를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면 패키지 형태의 인프라 구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플래그십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협력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제고하도록 ODA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 한국의 강점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협력해 온 농업, 보건,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와 도서·해안국의 협력 요청이 많은 청색 경제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유상원조를 확대하는 선결과제로서 아프리카 저소득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간 협력 확대를 지렛대 삼아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협력의 깊이와 폭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역할이 강화되고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 내 발언권이 커진 아프리카연합(AU)과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경제 환경이나 언어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54개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양자 협력을 정교화해야 할 것이다. 개별국가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려면 각국의 발전 수준, 발전 전략,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



[2023/24 불가리아 KSP] 미래에 대응하는 불가리아 건설산업의 도전과 기회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김지원
jiwonkim@kdi.re.kr

● 미래에 대응하는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도 예외 없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디지털화의 속도는 다소 느렸으나 200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도입되면서 건설산업의 생태계는 점차 진화해 왔다. BIM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젝트의 전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모델로서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스마트 건설의 핵심이다. BIM을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면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건설 과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건설 프로세스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친환경 요소를 극대화함으로써 건설을 지속가능하게 한다.

EU, 싱가포르, 미국 등은 BIM을 다양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 건설 혁신의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EU는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BIM Task

Group을 2016년 개설하여 스마트 건설 기술의 도입과 보급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BIM 도입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BIM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 불가리아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EU의 기조에 따라 회원국인 불가리아도 '건설 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불가리아는 2023년 세계지식재산권(WIPO)의 글로벌혁신지수에서 132개국 중 38위를 기록하며 '신흥 혁신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혁신'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에 그린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회복계획(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을 수립하고, EU에서 불가리아 GDP의 10% 규모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중 약 400만 유로가 건설 부문의 디지털 개혁에 예산으로 할당되었으며, 2026년까지

투자 설계 및 건설에 BIM을 시범 도입하는 목표를 국가계획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성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진전을 이루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였을 때도 디지털화 발전 속도는 여전히 더딘 편이다.

2023~2024년에 진행된 '불가리아 건설 부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하는 KSP 사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불안정한 정치 환경에서도 혁신성장부(Ministry of Innovation and Growth), 경제산업부(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 불가리아건설협회(Bulgarian Construction Chamber), 불가리아 중소기업진흥원(SME Promotion Agency), 투자설계기술자협회(Chamber of Engineers in the Investment Design), 건설사업관리협회(Bulgaria Association for Project Management in Construction) 등 여러 유관 기관의 지지와 함께 혁신성장부 산하 국영기업인 소피아테크파크와 건축토목측량대학교가 참여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그림 1] 23/24 불가리아 KSP 착수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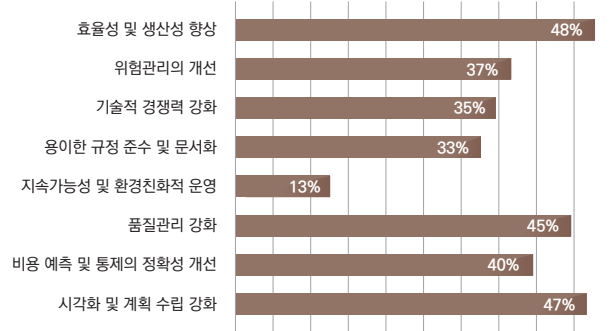
● 불가리아 건설산업의 현주소

KSP팀은 불가리아 건설업계의 BIM 인식 수준과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산업 참여자 7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BIM에 대한 기본 인식은 높지만 응답자별로 이해 수준에는 편차가 있다. 또 기업 규모가 클수록 BIM 친숙도가 더 높게 나왔다. 둘째, 불가리아 산업 주체 간의 BIM에 대한 공통된 컨센서스가 부족하여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많은 기업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기초 설계와 모델링에만 국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고급 수준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아직 저조하다. 셋째, 건축 분야에서는 BIM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지만 토목 인프라 대규모 사업에서는 그 활용이 부족한 편이다. 넷째, BIM 활용 이점과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이 다소 모호한 편이다. BIM이 개별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지만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적 운영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다섯째, BIM 도입에서 주요 장애요인은 숙련된 인력 부족(76%), 높은 초기비용(57%), 기존 시스템 및 프로세스와 통합 문제(54%), 변화 대응 어려움(44%), 내부 저항(41%) 등으로 관찰되었다. 이 외에도 불가리아 관계 부처, 기관 및 기업과 수차례 면담하여 확인한 결과, 낮은 R&D 투자, 정부·학계·산업계 간 디지털화에 대한 공감대 부족, 디지털건설을 총괄하는 거버넌스의 부재 등이 불가리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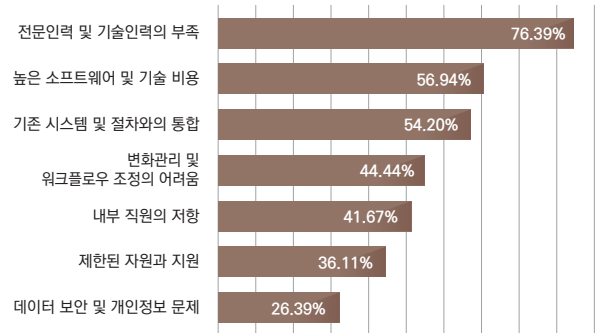
KSP 포커스

[그림 2] 현지 기업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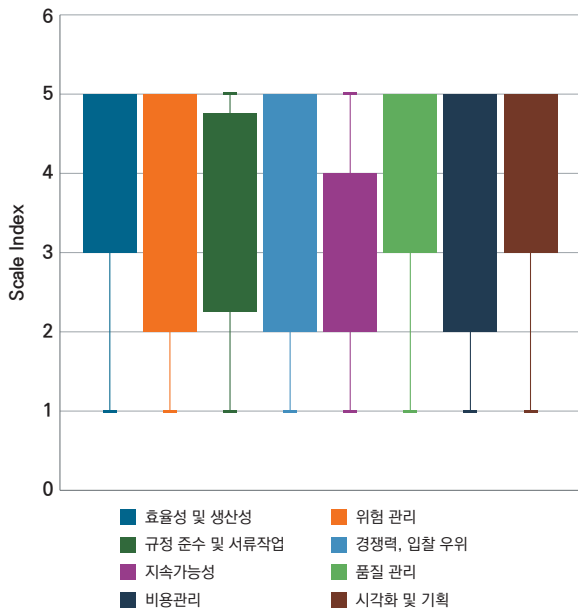
자료: 2023-24 KSP 정책자문보고서: 불가리아 건설부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2024)

[그림 4] BIM 도입 관련 불가리아 중소기업의 도전 과제



자료: 2023-24 KSP 정책자문보고서: 불가리아 건설부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2024)

[그림 3] BIM 활용 이점에 대한 불가리아 기업의 인식



결국 신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을 추진하려면 기술인력 확보, 충분한 자금 조달,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의 노력과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KSP팀은 불가리아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자 정부 정책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 디지털화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미시적 차원의 노력을 모두 제안하였다. 세부적인 제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2023-2024 불가리아 KSP의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세부 주제명	주요 제언 사항
1 불가리아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lgaria 2030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체계 수립 • 다양한 이해관계그룹에 대한 정부의 조정 역할 강화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관성 보장을 위한 정치적 노력 및 사회적 인식 제고
2 불가리아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의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 플랫폼 구축 및 BIM 전문인력 양성 투자 • 공공조달에서 BIM 사용 의무화 및 시범사업 실시 • 건축 인허가 디지털 발급 등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3 불가리아 건설 부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재정적 인센티브와 기술 도입의 초기비용 지원, 간소화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 (기업) 단계별 디지털 전환 로드맵 제시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4 불가리아 건설 부문 중소기업을 위한 BIM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맞춤형 BIM 교육 프로그램 개설 • 정부 및 공공 발주사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협력, 오픈콘텐츠 플랫폼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협력 체계 구축 • 대학 내 BIM 실무 교육 실시

자료: 2023-24 KSP 정책자문보고서: 불가리아 건설부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2024)

앞으로의 도전과 기회

디지털 전환이란 단순히 기술 도입과 재정 투입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체제와 제도 개선, 여러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인식 전환을 동반하는 종합적인 변화이다. 2023-2024 불가리아 KSP 정책제언의 결과는 현지전문가의 협조하에 지역개발공공사업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and Public Works), 혁신성장부, 불가리아중소기업진흥청, 유럽 건설 디지털 혁신 허브 등 여러 유관 기관에 공유될 예정이다. 최근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단기간에 정부 주도의 정책 실행과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럴수록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기대가 필요하다. 한국도 건설 분야의 디지털화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내외부 저항은 물론, 중앙정부조차 처음에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조언과 권고, 관심을 바탕으로 오늘날 정부의 BIM 로드맵 개발과 기술 도입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불가리아에서도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된 인식과 관심을 형성하고, 시범사업을 토대로 긍정적 경험을 축적한다면 불안정한 정치 여건 속에서도 건설 혁신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내디딜 것으로 기대해 본다. ▣

[그림 5] 2023-2024 불가리아 KSP 최종보고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 **방호경**
hkbang@kdi.re.kr

최근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시각에서 자국의 공급망 구조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대외적 환경변화를 활용하여 산업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및 첨단산업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핵심광물 보유국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비축, R&D 지원 등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KDI CID는 올해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 중 기술협력의 역할 및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대한 우려의 발생 원인과 주요국의 대응 및 한국의 공급망 구조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간략히 다루는 한편, 전통적인 무역구조적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배경 및 주요국의 전략, 한국의 공급망 구조 및 노출도(foreign exposure) 분석 및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협력시 고려요인을 통해 기술협력의 역할 및 방향 모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제2장에서는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인위적인 재편 과정에 초점을 두고 각국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검토하였다. 미국은 국내 제조기반 강화와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EU는 CRMA와 Green Deal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제조역량 강화와 우회적 공급망 구축으로 대응하며, 일본은 경제안보법을 중심으로 ASEAN과 Global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은 직접보조, 대외정책, 수출통제, 환경규제라는 정책 수단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차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직접보조와 환경규제를, 중국은 직접보조와 수출통제를,

일본은 대외정책과 기술보호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공급망 3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욱 구체화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2024년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규제 대응국의 대응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IRA 정책의 대폭 수정과 함께 IPEF, MSP와 같은 다자간 협력체계가 양자협상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CHIPS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대중국 견제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며, 환경규제 대신 관세부과나 수입제한 같은 직접적 수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맹국과의 공조보다는 미국 단독의 직접적인 통제 방식이 강화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총액 무역데이터와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한 부가가치 무역을 연계하여 살펴봤다. 이를 통해 한국의 주요 품목별 수입집중도, 특정 산업부분의 국가별 노출 정도(foreign exposure)를 분석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 전략에 포함된 이차전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공급망 구조를 파악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광물 수입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원재료는 주로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방산 등에 투입되는 핵심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류, 중류 및 하류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긴요한 것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 주목받는 산업인 이차전지와 웨이퍼(wafers)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국의 공급망 구조와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의 외국 공급망 노출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산업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상류에 해당되는 핵심광물 등의 원자재 확보를 통해 현지 및 국내에서 정제련 단계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근 핵심광물 보유국의 광물 정제련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화 정책과 연계하여 주요 광물 보유국에서 정제련 단계를 수행하여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선정된 5개국가를 대상으로 생산단계별 정책, 대외정책과의 연계, 지속가능성 실사 대응 역량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원보유국과의 기술협력 전략은 생산단계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상류부문 접근성이 낮고 중하류부문 산업 육성 의지가 높은 경우 중하류 부문 패키지 전략을 통한 접근이 요구되며, 상류부문 접근성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민간 주도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과 연계한 기술협력의 효과적일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우 자국 내 제조업 육성 의지가 강해 이를 고려한 협력 방안 수립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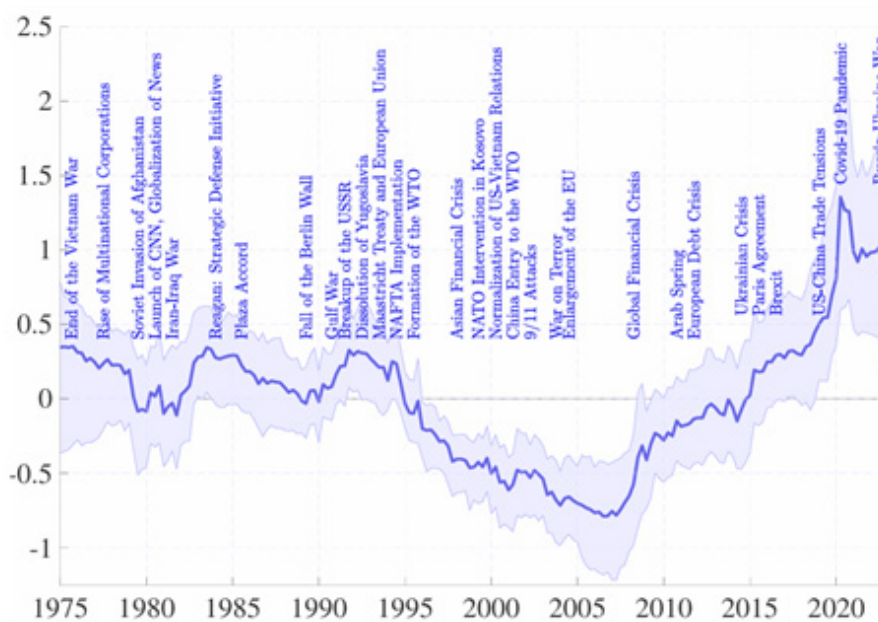
공급망 실사 대응 역량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호주가 가장 선진적인 체계를 구축한 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칠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ESG 정보공시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이행 역량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별 대응 수준에 맞춘 맞춤형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이 기술협력의 주요 내용이 될 필요가 있다.

한국과의 기술협력 수준은 직접적인 광물협력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국가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상대적으로 협력 수준이 낮은 국가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에 형성된 대외관계에 기반하여 기술협력을 고도화하되,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공급망 블록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제5장에서는 제2장~제4장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중 기술협력의 역할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공급망 안정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즉, 추가비용을 상쇄하고 협력대상국의 공급망 연계성 강화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획 혹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해외자원 개발, 2) 생산기지구축 패키지 진출, 3) 공급망 실사관련 대응 4) 전주기 기술협력범위 확대와 관련된 기술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그림] 지경학적 분절화 지수(Geopolitical Fragmentation Index) 추이



자료: Fernandex-Villaverde et al(2024)

<표> 공급망 단계별 기술협력 전략의 구분

구분	상류(채굴/추출) 접근성	중류(정·제련) 부가가치화	하류(최종재) 산업 육성	공급망실사 대응 역량			기술협력 단계		
				상	중	하	상	중	하
남아공	O	△	△			O			O
호주	O	X	X	O			O		
인도네시아	O	O	O			O		O	
베트남	△	O	O			O			
칠레	X	O	O		O			O	

자료: 방호경 외(2024):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협력실 정책자문4팀
전문연구원 **최다인**
dainchoi@kdi.re.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기획실 정책자문1팀
전문연구원 **하지유**
jiyu25@k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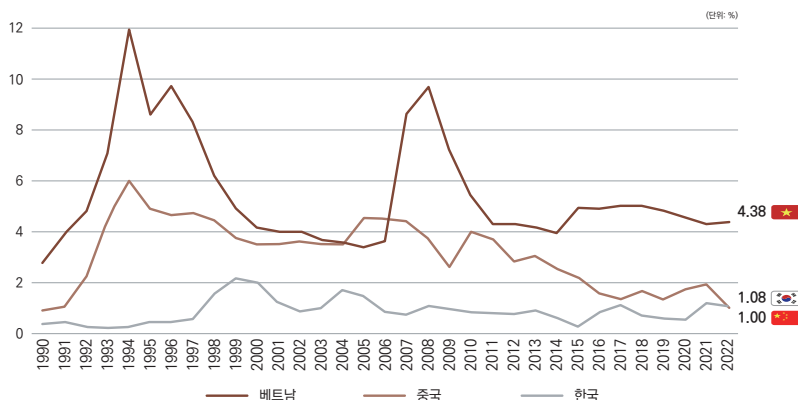
중소기업은 개발도상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낮은 금융 접근성을 해결하는 정책금융으로서 신용보증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KSP와 같은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에서도 신용보증제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과 협력국 간의 맥락적 차이를 고려한 사업 기획 및 추진을 위해 베트남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베트남의 신용보증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자 경제와 산업 구조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의 중요한 맥락적 차이를 발견하였다.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22년 기준으로 GDP 대비 4.38%를 차지하며, 한국은 물론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한국이 국내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주도의 산업화 시기에 FDI 억제

정책을 추진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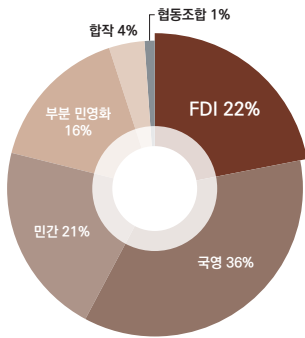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구축한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외국계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이다. 국영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이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0.23%에 불과하다. 한국은 후발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 체제를 선택해 모든 생산 요소의 배분과 시장경제 질서를 대기업 위주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운영 자본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제도의 수요로 이어졌다. 반면, 베트남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본을 확보하고자 FDI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중소기업은 외국계 기업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는 한국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림 1] GDP 대비 FDI 비중 - 베트남, 중국, 한국 비교



자료: Our World in Data.

[그림 2] 베트남 100대 기업 소유형태별 분류(2016년)



자료: Vietnam Report Top 500, KOTRA(2016.9.29.) 재인용.

더불어 베트남은 경제 규모에 비해 은행 부문과 직접금융 시장의 규모가 작고, 금융 접근성 및 금융 인프라 수준이 미흡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금융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신용보증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베트남에서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담보 대출 비중이 높아 담보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또 각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기업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바람에 신용정보 시장이 비효율적이며, 디지털 경제 확대에 따른 신용 정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의 신용보증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내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제도와 베트남개발은행(Vietnam Development Bank)이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제도로 이원화된 구조이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2017년 기준 총 27개 성·시에서 비교적 활발히 운용되지만, 베트남개발은행은 2009년부터 중소기업 대상 4억 6,300만 달러 규모 신용보증을 지원했으나 재원 확보가 어려워 2011년 신규보증 발행을 중단했다. 2018년 신용보증 관련법을 제정해 보증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금의 기본재산 건전성이 낮고 신용평가 전문성이 부족해 보증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1]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별 개관

구 분	지역신용보증기관(CGF)	베트남개발은행(VDB)
설치연도	2001년	2009년
법령근거	Decree No.34/2018/ND-CP Decision No. 58/2013/QD-TTg Decree No. 115/2004/QD-TTg Decision No. 193/2001/QD-TTg	Decree No.03/2011/QD-TTg Decision No. 14/2009/QD-TTg
재원조성	지방정부	중앙정부
기본재산	1,000억 베트남동	2,000억 베트남동
운용배수	기본재산(정관자본금)의 3배	세부규정 없음
보증한도 (기업당)	기본재산의 15%	기본재산의 15% 이하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 가능	최대 100% 보증 가능
보증조건	보증요구 자본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담보 보유	개별사업당 자기자본 10% 이상 투입
대상채무	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감독기관	지역인민위원회	재무부

자료: ADB(2018).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기본재산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은행 등에서 정기 출연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 내 보증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담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또 신용조사 업무와 신용평가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부패를 방지하도록 보증신청, 심사, 감독, 검사 등 기금 운용절차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며, 구상권 행사 애로 요인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분석하면서 각국의 특성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지원을 제공하려면 금융시스템, 기업의 자금 수요와 공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직접금융시장(투자보증제도) 혹은 간접금융시장(대출보증제도)의 정착 여부에 따라 적합한 신용보증제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낙후된 금융시장에서는 신용보증제도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신용사회 정착 기반을 먼저 조성하고, 신용정보 수집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의 소유권과 구상권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용보증제도에 우호적인 환경부터 조성해 나가야 한다. ▣

YKSP 7기 수료식 및 8기 오리엔테이션, YKSP 동문의 밤 개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유지원

jwyoo24@kdi.re.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24년 10월 10일(목)~11일(금) 양일간 YKSP 7기의 수료식, 8기 오리엔테이션과 동문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다.

YKSP(Young KSPians)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학생·대학원생들에게 KSP 사업 참여를 통한 개발협력 실무 경험은 물론 개발협력 분야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등 학술 역량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YKSP는 2012년도에 시작하여 2024년 기준 총 142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수료자들은 현재 공공과 민간, CSO 까지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에 수료한 YKSP 7기는 총 7명으로, ▲우즈베키스탄, ▲불가리아, ▲몽골, ▲캄보디아, ▲슬로바키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타지키스탄 KSP 사업에 배정되어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신규 기수인 8기의 경우 지난 9월에 총 22인의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8기 활동의 공식적인 시작점이 되는 이들 간의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통해 KSP 사업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 한국경제발전경험,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등의 유관 교육에 참석하였다. 또한 인턴 활동 기간 동안 참여하게되는 국가 사업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KSP 사업관리자(PO)와 인턴이 함께 참여 국별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외에도 KSP의 역사 및 소개, YKSP

CID 소식

활동과업 및 업무 체크리스트 등이 상세히 정리된 매뉴얼북 또한 배포, 설명되었다.

7기 수료식과 8기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YKSP 전 기수가 만나는 동문의 밤 행사를 연계 행사로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선후배 YKSP간 네트워킹 기반을 마련하고 커리어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기수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8기 인턴들은 “기수별 선배 인턴 7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출을 위한 커리어 설계에 대해 공유해준 내용이 유용했고 인상깊었다”라고 행사 참석 소회를 전했다. 한편 선배 인턴인 1~7기 인턴들의 경우, 후배 인턴과의 교류를 통해 YKSP 활동 경험이 개발협력 분야 진출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부뒸했다고 전하며, 향후 개발협력 분야에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앞으로 8기 YKSP는 각자가 배정받은 2024/25년 KSP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YKSP 사업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젊은 인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YKSP 활동상은 YKSP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행사

KSP 20주년 성과공유컨퍼런스: KSP 20년 성과와 비전 개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송지은
jesong@kdi.re.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24년 9월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 KOTRA,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KSP 20주년 성과공유컨퍼런스: KSP 20년 성과와 비전」을 개최하였다.

KSP 성과공유컨퍼런스는 매년 해당연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를 공유하고 KSP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는 지식공유 세미나이며 2007년부터 개발협력, 경제협력 부문의 국내외 정부, 학계, 민간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관계자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개최되어 왔다. 국내 정책과 국제 동향에 발맞춘 다양한 주제와 연계하여 KSP 성과와 역할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세계 유수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식공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성과공유컨퍼런스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0년간의 주요 KSP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식협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논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

컨퍼런스 개최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동철 KDI 원장, 진념 前 부총리, 트니 위두리안티(Teni Widuriyanti)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차관, 파티마 야스민(Fatima Yasmin)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가 참석하여 KSP의 20주년을 축하하고 국제사회에서 KSP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 세션 ‘KSP의 여정: 과거, 현재, 미래’에서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난 한국 사례로 KSP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KSP를 통해 협력국이 이룬 성과와 향후 비전을 제시하였다. 소믹 룰(Somik V. Lall) 세계은행 선임자문역은 2024년 8월 공개된 세계은행 보고서 “Middle-Income Trap(중진국의 함정)”을 언급하며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는 데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으며, KSP와 같은 지식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팜 호앙마이(Pham Hoang Mai) 베트남 기획투자부 국장과 앤서니 상(Anthony Sang) 케냐 콘자테크노폴리스개발청 본부장의 발표로 KSP의 성과를 재조명하였다. 베트남은 2004년을 시작으로 경제발전전략 지원 6건,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3건, 인구 고령화 사업 1건을 통해 KSP가 국가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 기반을 제공했다고 평가하였다. 2015년 KSP를 시작으로 4년간 KSP 정책자문사업에 참여한 케냐 콘자테크노폴리스는 KSP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육과 주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을 공유하였다. 이후 2022년 KSP 협력이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써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하였다. 확장된 KSP 협력 지평을 발표한 세라 맥과이어(Sarah McGuire) 주한영국대사관 디지털통상정책 참사관은 올해 새롭게 착수된 2024/25년 영국 KSP 사업(디지털 표준협력)을 소개하며 KSP 사업이 기존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양국 간 공동연구로 글로벌 주요 의제를 선도하고 협력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역할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KSP의 미래전략을 발표한 김동진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 과장은 앞서 협력국 관계자가 발표한 KSP의 성과와 주요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위기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도록 KSP를 통한 지식공유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내 ODA와 연계하여 지식공유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자고 하였다.



행사

두 번째 세션 ‘글로벌 지식협력의 신동향과 도전 과제’에서는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이 기초발제를 하여 지식협력의 흐름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주요 지식공유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효과적인 지식협력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김정욱 소장은 지식협력이 일방향적 지식을 전달하던 전통 방식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호학습(Mutual Learning)으로 확대되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의 지식협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이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알레한드로 게레로 루이스(Alejandro Guerrero-Ruiz)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국 정책분석관, 올란다 페르난데스 로멘(Yolanda Fernandez Lommen) 아시아개발은행(ADB) 부국장, 닐스 카이처(Niels Keizer) 독일 개발 및 지속가능성 연구소(IDOS), 체이컬 누르야킨(Chaikal Nuryakin) 인도네시아 경제사회연구소(LPEM) 소장이 참여해 지식공유의 효과성을 확대하는 기관 간 주요 전략과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KSP 20주년 성과공유컨퍼런스는 온·오프라인 총합 약 703명(오프라인 407명, 온라인 296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KSP 성과와 기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과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만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많은 국내외 관계자, 협력국 고위급, 한국 주재 공관 고위급 인사가 현장에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KSP가 주도하는 지식공유가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이슈, 공급망 안정화 등의 글로벌 공조, 미래지향적 정책 등 새로운 지식의 공동 창출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KSP의 확대된 역할과 방향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컨퍼런스로 평가된다. ▾



행사

KDI-Brookings 공동세미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불평등과 글로벌 경제 융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김다오미
kdom228@kdi.re.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와 브루킹스 연구소는 2024년 10월 22일 미국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불평등과 글로벌 경제 융합 (Digital Transform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Inequality and Global Economic Convergence)’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도전 과제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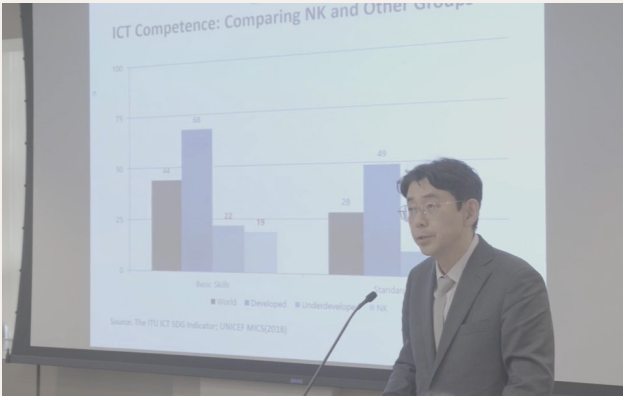
개회식에서는 조동철 KDI 원장, 브라히마 쿨리발리(Brahima Coulibaly) 브루킹스 연구소 부원장이 참석하여 기술 혁신의 중요성과 기술 격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강조했다. 기조 연사인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뉴욕시립대 교수는 ‘글로벌 불평등의 역사와 지정학’을 주제로 발표하고 산업혁명 이후 글로벌 불평등은 증가와 완화를 반복해왔으나,

최근 중국 성장 둔화와 아프리카 성장 불확실성으로 불평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첫 번째 세션인 ‘디지털 신기술이 글로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루카스 상헬(Lucas Chancel)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세계 소득 불평등의 동향, 원인, 그리고 정책’을 주제 발표하였다. 상헬 교수는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개혁과 교육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루이스 펠리페 로페즈-칼바(Luis Felipe Lopez Calva) 세계은행 빈곤 및 평등국장은 ‘빈곤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신기술의 잠재력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디지털 접근성 확대와 국제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쉬 비벤스(Josh Bivens) 경제정책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마티아스 부소(Matias Busso) 미주개발은행 수석 이코노 미스트는 도전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술 발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의 시작으로 안톤 코리넥(Anton Korinek) 버지니아대 교수는 ‘AGI(인공지능일반화) 이후의 노동과

행사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지오바니 멜리나(Giovanni Melina) 국제통화기금 기후정책부 차장은 'AI, 노동, 그리고 거시경제적 영향과 분배'를 주제로 발표하며 AI의 발전이 경제성장과 불평등 확대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적 재분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메리 홀워드-드리미어(Mary Hallward-Driemeier) 조지타운대 교수는 '신기술과 글로벌 경제 융합' 발표에서 디지털 기술은 경제적 수렴과 포괄적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디지털 접근성 확대와 함께 신뢰, 규제, 공정한 데이터 활용 등을 포함한 정책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페데리카 살리올라(Federica Saliola)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해리 홀저(Harry Holzer) 조지타운대 교수, 랑드리 시네(Landry Signé)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며, 기술 혁신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 세션은 '지역별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산티아고 레비(Santiago Levy)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라틴아메리카의 신기술과 생산성 및 불평등의 역학'이라는 발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기존 경제 구조로 인해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격차로 경쟁력을 잃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공정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정 KDI CID 개발연구실 총괄은 'AI 기술의 노동 시장 영향: 한국 사례 연구'를 소개하고,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직종에서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 훈련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혜영 KDI CID 평가팀장은 '디지털 격차와 정책적 의미' 발표에서 한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소개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확대가 타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발표 후, 아나 코바초(Ana Corbacho) 국제통화기금 부국장, 홍종수 KDI 부연구위원, 이종규 KDI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장은 각 지역에서 겪고 있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Brookings 연구소를 비롯해 IMF, 세계은행, IADB 등 주요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글로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AI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이 글로벌 불평등과 경제 융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논의에 기여하고자 협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

2024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계획



국제개발협력연구

#	과제명	주요내용
I. 개발협력 정책연구		
1	지식공유사업의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공유사업의 위상 및 사업실적과 성과 평가 ■ 지식공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대내외 도전요인을 점검 및 내부 개선 ■ 사항을 도출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및 제시 ■ 해외 국제개발협력 및 연구기관 조사 및 선진 사례 발굴 ■ 지식공유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도출
2	개발도상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문별로 산업기술혁신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 ■ 한국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상황과 성장단계에 맞게 자생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산업기술혁신 표준모델(K-Innovation)”구축
3	뉴노멀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환경·에너지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개도국의 정책 분석 ■ 선진국-개도국간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선진국-개도국간 기후금융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에너지 전환의 효과성 분석 : 한국의 경험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 ·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분야 협력방안
4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협력 역할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배경 및 주요국의 전략 분석 ■ 한국의 공급망 구조 및 노출도 분석 ■ 핵심광물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협력 관련 시사점 도출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협력의 역할 및 방향성 모색
II. 한국발전경험 체계화 연구		
5	중진국 함정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지식공유사업에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중소득국 단계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경쟁, 기술혁신, 고등교육)을 당시의 정책적 과제와 시행착오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시사점 도출
6	개발금융 경험 체계화 및 지식공유 고도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금융 관련 최근 동향 및 주요 의제 ■ 선진국의 개발금융 파트너십과 지원 전략 ■ 개발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지원 효과 ■ 개발도상국의 개발금융기관 역량강화 체계화 방안 ■ 개발금융을 활용한 지식공유 고도화 전략
III. 개발협력성과평가 연구		
7	국제개발협력의 유형별 성과지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선진공여국 및 공여기관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검토, KSP 사업에의 시사점 도출, 평가의 디지털 전환 방안 모색 ■ 지식기반 개발협력 평가체계 구축 및 사례 분석
IV. 지역·국가 심층연구		
8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P 사례 기반을 기반으로 협력국 및 분야를 선정하여 △정책·제도 현황 분석, △정책·제도 협력 사례 조사, △정책·사업 시사점 도출 및 제시 <p><small>*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페루 보건분야 디지털 전환, 중남미 국가 순환경제 전환 등</small></p>

9	디지털 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무역을 통한 개발(Digital Trade for Development) 관련 국제 논의 및 도전과제 분석 ■ 디지털무역 협정 분석 및 협력의제 유형화 및 체계화 ■ 디지털무역 관련 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조사 ■ 디지털무역 원활화 및 개발도상국 디지털무역 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과제와 추진방향 제시
---	--------------------	---

국제협력사업

#	협력기관	주요내용
I. 개발협력 정책연구		
1	아시아생산성기구 (A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현황 분석 국가 생산성 제고 전략 및 액션플랜 개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5 기후변화 관련 APO 회원국 생산성 분석,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 및 시사점 제시
3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자문 주요 정책 분야 연구 및 정책자문

국제행사

#	협력기관	주요내용
I. 개발협력 정책연구		
1	세계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세계은행 녹색성장세미나 일시/장소: 2024년 2월 28일/워싱턴D.C. 주제: Green Transition Strategy, Green Transition Financing, Carbon Pricing 등
2	브루킹스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Brookings Joint Seminar 일시/장소: 2024년 10월 22일(예정)/워싱턴D.C. 주제: Digital Technology, Inequality, and Global Economic Convergence
3	A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4년 12월 17일(화), 동경 주제: 글로벌 공급망과 지속가능발전

2024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요 연구 및 협력 실적



국제협력과 지식공유(Sharing Knowledge, Sharing the Future) (최근 3년)

연도	세부 내용
2023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3: 협력국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정책환경을 중심으로 ■ 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 세르비아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혁신기술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 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2022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2: 뉴노멀시대의 스마트정책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 행정 ■ 재정 ■ 농업 ■ 생산 ■ 교육 ■ 헬스케어
2021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3: 협력국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인프라 및 서비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발전방안 ■ 에너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 교통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전 방안 ■ 개발금융의 이해와 활용



국제협력사업

협력기관	연도	사업명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ADB)	2023	■ Promoting Digitalization for Green and Inclusive Growth in Developing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개발은행(ADB)	2021	■ 스리랑카 국가개발계획 지원
아시아생산성기구(APO)	2023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4
	2022	■ 파키스탄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2022	■ 중고소득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전환에 대한 정책연구
	2022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3
아시아생산성기구(APO)	2021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2
	2020	■ 베트남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아시아생산성기구(APO)	2020	■ 라오스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2020	■ 라오스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세계은행(WB)	2021	■ COVID-19의 외국인고용허가제(EPS)에 대한 영향
	2019	■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숙련도 제고 정책연구사업
	2019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3차(카메룬, 서부발칸)
	2018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2차(10개국 개별 사업 및 성장 모형, 공기업 개혁 연구)
	2017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1차(8개국 개별 사업 및 거시경제, 포괄적 성장 연구)

협력기관	연도	사업명
미주개발은행(IDB)	2021	■ IDB Invest 협력사업: 한국의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연구
	2020	■ 라틴아메리카와의 한국 인프라 서비스 지식공유 및 공동연구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2022	■ 이집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연수 · 연구
	2018	■ EBRD-KDI 공동 민관협력(PPP)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사업
유엔개발계획(UNDP)	2017	■ KDI-UNDP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 15개년계획 정책자문 사업
적도기니 재정경제기획부	2019	■ 적도기니 국가개발계획 자문사업
아부다비 개발기금(ADFD)	2017	■ 아랍에미리트 ADFD 수출금융프로그램 타당성조사 사업

국제 행사

연도	협력기관	행사명 및 내용
2023	브루킹스 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 일시/장소: 2023년 4월 11일/워싱턴D.C. 주제: Productivity in a Time of Change
	ADB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 일시/장소: 2023년 5월 2일/ 인천 송도 주제: 아시아 복합위기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개편과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 19 이후 재정관리체계 등
	ADBI	ADB 연차총회 부대행사“KDI-ADBI 공동세미나: 디지털, 기후, 그리고 회복력” 일시/장소: 2023년 5월 4일/ 인천 송도 주제: 디지털 전환과 기후 효과
	세계은행 TDLC	2023 KDI-WB TDLC 공동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3년 11월 17일/ 인천 송도7 주제: 개발도상국 발전 제약요소 및 기회 분석, 도시 정책, 지식기반 발전 등
2023	-	2022 KDI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2년 10월 21일/ 서울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
2020	-	2020 KDI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11월 19일(목) 14:00~16:00/ 서울 주제: 개발을 위한 혁신 *기업과 혁신, 도시와 혁신, 기술과 혁신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p>2024년 3호</p> <p>▶</p>	<p>이슈톡 이슈톡 이슈톡</p> <p>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 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 최희주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과 우리 기업의 대응 / 오범택 ▶</p> <p>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 권혁신 ▶ 개발효과성 담론에 대한 한국의 기여: GFEDC와 부산포럼을 중심으로 / 송지선</p> <p>헝가리 EIPP: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 최효정, 안치영</p> <p>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 남보라, 김하아람</p>
<p>2024년 2호</p> <p>▶</p>	<p>이슈톡 이슈톡</p> <p>기후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시각 / 정홍상 ▶ 디지털헬스케어의 중요성 및 지식공유의 의미 / 강재현</p> <p>국내 수소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 이슬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와 수도이전 국제협력 추진방안 / 방설아 ▶</p> <p>[2023/24 칠레 KSP] 병원 대기 끝에 죽음이 아닌,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 홍기현</p> <p>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ESG,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 및 정책과제 / 김대용, 황서영</p>
<p>2024년 1호</p> <p>▶</p>	<p>이슈톡 이슈톡</p> <p>ESG와 국제개발협력 / 정무경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 정지훈 ▶</p> <p>순환경제로의 전환, EU는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나? / 박상우 중동정세와 향후 전망 / 강문수 ▶</p> <p>리투아니아와 문화창의산업 (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 안치영</p> <p>아프리카 지역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제개발협력 / 우혜영, 이소희</p>
<p>2023년 특별호</p> <p>▶</p>	<p>2023년 지식공유브리프 특별호를 기획하며 / 김정욱</p> <p>이슈톡 이슈톡</p> <p>2023년 국제개발협력을 되돌아보며 / 김은주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 권을 ▶ 기술협력 OD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 방호경 · 이소희</p> <p>동향 분석</p> <p>2023년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 / 이요한 ▶ 2023년 아프리카 ODA의 주요 특징 및 전망 / 김은경 ▶ 2023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과 전망 / 정상희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와 새로운 대응: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김은지 ▶</p> <p>KSP 포커스</p> <p>페루 경제특구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 윤근영</p> <p>CID 연구포커스</p> <p>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p>

<p>2023년 3호</p> <p>▶</p>	<p>이슈톡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 김연규 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 정창구</p> <p>동향 분석 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 이미연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 오정은 </p> <p>KSP 포커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 이세훈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 서규혁</p> <p>CID 연구포커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 이진이</p>
<p>2023년 2호</p> <p>▶</p>	<p>이슈톡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 안충영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 이준희 </p> <p>동향 분석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 강경재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 김준</p> <p>KSP 포커스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 노보배 [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 한재현</p> <p>CID 연구포커스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대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 우혜영</p>
<p>2023년 1호</p> <p>▶</p>	<p>이슈톡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 임호열  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망, 국제개발협력 / 성한경</p> <p>동향 분석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 김은주  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 이재광  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 황금물결</p> <p>KSP 포커스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 유성희</p> <p>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 김대용, 이소희</p>
<p>2022년 3호</p> <p>▶</p>	<p>이슈톡 개도국의 혁신투자는 다다익선인가? / 정성철  우리나라 '정책자문 ODA 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 김성규 </p> <p>동향 분석 개발협력평가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가능성과 도전과제 / 홍문숙 아프리카의 정당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 김유나, 홍은선</p> <p>CID 연구포커스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 김정욱, 윤지희 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p>
<p>2022년 2호</p> <p>▶</p>	<p>이슈톡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 이준원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 윤석현</p> <p>동향 분석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 김지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 황금물결 </p> <p>KSP, EIPP 포커스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 한재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 김하아람</p> <p>CID 연구포커스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 홍성창</p> <p>YKSP 스토리/CID 소식 YKSP,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태연</p>

2022년 1호



이슈특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한국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 / 정혁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의 도래가 한국 개발협력에 던지는 함의와 과제 / 김양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의 전환 / 장은혜
동향 분석	KSP 고도화 전략과 지식공유사업법(가칭) / 홍성창, 김서영, 이미연 국제탄소시장과 ODA 활용 동향 / 김예림
KSP, EIPP 포커스	[페루 KSP] FTA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으로, 페루에게 전하는 한국의 경험 / 김지원 · 윤근영 [세르비아 KSP]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송지은
CID 연구포커스	2021 CID 국제개발협력 연구 / 우혜영

는 KDI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해당 게시판으로 연결, 의 경우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됨.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 문의 김다오미 연구원(044-550-4276, kdom228@kdi.re.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발행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발행인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편집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위원

| 편집위원 김대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 김민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 편집간사 김다오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연구원

| 문의 044-550-4276,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